

학생 인권 넘어 학교구성원 모두에게로

전북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조례 제정 가시화

조례 제정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유일 학생인권 조례 그대로 존치... 충돌 조항 일부 개정

학생 인권을 넘어 학교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을 수 있는 '조례 제정'이 가시화되고 있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난 10일 창조미래 시청각실에서 전라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 조례는 그동안 가칭으로 불려왔던 전북교육인권조례의 공식 명칭이다.

이날 공청회에는 학생·교직원·학부모 등 교육주체를 비롯해 교육인권에 관심있는 전북도민 200여 명이 참여해 조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의견도 제시했다.

먼저, 전북대 정영선 교수가 전라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정 교수는 기존의 전북학생인권조례는 인권보호 대상이 학생에만 국한돼

있어 학교 구성원 전체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조례에는 △제2조(적용범위) 학생, 교직원(교원, 교육행정직, 교육공무직), 보호자 △제9조(인권센터) 전라북도교육청교육인권센터 설치(인권담당관) △제13조(인권위원회) 15명 내외의 구성/학생, 교직원 인권 침해 사안 심의 등 △제23조(구제신청과 조치) 학생, 교직원 인권 침해 구제신청, 교권침해 상담, 조사 신청 △제24조(조사) 학생, 교직원 인권침해조사(직권조사), 교권 침해 조사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는 학교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적 기반과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전담기구(교육인권센터)를 두고 상담과 구제신청, 조사를 함께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학생인권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자 인권을 동시에 보호하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지원체계를 구축한 교육청은 전북교육청이 유일하다.

이날 토론자로는 영경형 전 전북도청 인권담당관, 오준영 전북교총 정책연구위원, 노정환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인권증진팀장 김영근 전공노 사무국장 체민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상임활동가가 참여해 조례 제정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현재 학생인권만 보호하는 학생인권조례를 뛰어넘어 학교구성원 전체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인권보호 대상을 학생에서 교직원까지 확대함으로써 교육계 인권의식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라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 제정과 관련해 기존의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는 그대로 존치되며, 학생의 인권보장 부분도 유지된다. 다만, 중복되거나 충돌되는 일부 조항은 개정될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지난 10일 전주 상산고등학교를 찾아 현장간담회를 주재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사진 오른쪽)이 서거석 전북도교육감과 면담을 하고 있다.

고교 교육력 제고·지역인재 양성 방안 논의

서거석 교육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주재 상산고 현장간담회 참석 "책임 있는 공교육으로 실력·인성 갖춘 미래인재 육성할 것"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이 지난 10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고교 교육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 간담회를 연 전주 상산고를 방문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서거석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전북교육청은 아이들이 학력과 올바른 인성을 키워 대한민국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상산고와 전북교육청, 교육부가 함께 손잡고 고교 교육 대전환이라는 교육 현안에 대해 논의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1980년 설립 인가된 상산고는 지난 2002년 자립형사립고로 지정된 후 2010년에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주호 부총리가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고교 교육력 강화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 측에서 홍상욱 이사장과 김명환 교장, 학생과 학부모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상산고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 등이 소개됐고, 고교 교육력

제고 방안과 지역인재 양성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에 앞서 서 교육감은 지난달 12일 서울에서 이 부총리를 만나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앞둔 미래교육캠퍼스 설립 등 지역 교육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서 교육감은 "전북교육청은 기초학력 책임교육과 미래역량을 키우는 수업혁신을 통해 학생중심 미래교육 슬로건으로 더불어 미래를 여는 전북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 "책임 있는 공교육으로 실력과 인성을 두루 갖춘 미래인재를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글로벌 동행 네트워크 프로젝트' 성과 공유

전북대 4단계 BK21사업 일한... 교류회 열고 성과 공유 대학별 우수성과 발표, 우수팀 선정 올 해외대학 방문 지원

전북대학교는 '글로벌 동행 네트워크 프로젝트'를 통해 대학원생들이 해외 대학과의 활발한 교류와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른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한 교류회를 지난 9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전북대 4단계 BK21사업의 일환으로 대학원 지도교수의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를 제자들에게 전수하기 위해 해외 대학 내 우수 인재 간 인적 교류 활동을 지원 국제 공동연구 활성화 기틀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기획된 국제학술교류 프로그램이다.



이에 전북대는 1기 1단계에 10개 팀 중 우수활동 5개 팀을 선발 지난해 2단계에서 미국과 일본, 인도네시아 등 해외 대학 및 글로벌 연구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먼저, 식품영양학과는 미국의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대학과 갈색지방세포의 발달 관련 분석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하며 대학원생의 상위과정 진학을 계획하

고 있다.

또 사회복지학과는 인도네시아의 파순단대학교와 국제공동연구협약을 체결하고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어 농업경제학과는 일본 우쓰노미야대학교와 곶창친화식품분야 업무협약(MOU)을 맺고 관련 주제 연구를 진행하는 전북대 석사박사과정으로 입학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2기 6개 팀을 새롭게 선발해 미국과 중국, 노르웨이, 캐나다, 영국 등으로 교류 대학 범위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차연수 대학원장은 "대학원혁신사업의 자량이 된 글로벌 동행 프로젝트가 연구·교육·취업 등 다각적 분야에서 지속적이며 긍정적인 환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학교 생태공간, 학습의 장으로 확장

도교육청, '우리학교 생태지도 만들기' 공모 24일까지 공모사업 신청시스템으로 신청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학교의 생태공간을 학습의 장으로 확장 운영키로 했다.

지난 1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생과 교사의 소생태계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2023 우리학교 생태지도 만들기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학교 운동장 및 주변 공간의 곤충 식물 등의 생태계를 관찰한 후 우리 학교의 생태지도를 만드는 환경 체험 프로그램이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15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생태공간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는 20개 학교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운영을 희망하는 학교는 오는 13~24일까지 도교육청 홈페이지 내 공모사업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학교에는 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1교 1생태전문가를 연계할 예정이다.

한편 우리학교 생태지도 만들기는 학교의 학년 및 학급을 연구학년(급)으로 선정해 담당교사와 생태전문가가 협력해 생태탐구 수업을 진행하게 된다.

이후 연구 학년(급)의 1년간 생태탐구 수업의 결과물로 '학교 생태지도'를 제작, 이를 모든 학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성환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우리 지역에는 학교에서 가까운 곳에 접할 수 있는 생태자원들이 많다"며 "학교의 생태공간을 교육과정과 연계해 생태감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